

“현대중공업 독점, 한국 조선산업 망가뜨리는 길”

대우조선 매각 문제점 국회 토론회... “현중 인수는 정몽준 특혜, 경남 조선업 몰락, 해고 사태 불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한국 조선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속노조와 조선업 종노조연대,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2월 21일 국회에서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



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득이 되지 않고, 한국 조선산업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했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라는 빅2 체제로 조선업계를 재편한다고 한다. 반면 토론자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조선업계를 압도하는 슈퍼 빅1 체제로 재편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이 동종업체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생산규모 축소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국내 조선업계 지배할 공룡 재벌 탄생 우려

안재원 노조 노동연구원장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제 살 깎아먹기 수주를 막고 선가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 조선업계의 경쟁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재원 원장은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물량팀 등 비정규직 노동을 통제해 지금보다 더 험값에 노동력을 사용하고, 협력업체 압박을 강화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국내업체 수주 기준으로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경남의 조선업 기자재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납품구조에 놓여 있다. 줄줄이 문을 닫거나, 대규모 해고 사태에 부닥칠 수 있다. 선박엔진 등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공급하는 부품은 증가하고, 경남 남해안에 있는 대우조선의 거래업체들은 물량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상우 노조 경남지부 두산엔진지회장은 “지회는 산자부에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엔진 등 기자재 업체들을 동반해 교통정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알아서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 같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두산엔진지회 조합원들이 일하는 HSD엔진은 회사 전체 물량 중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하는 물량이 30%가 넘는다.

대우조선 매각, 정몽준 재벌오너 일가만 배불러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꿨다. 정몽준 일가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의 주식 30%를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현대중공업에서 분리해 현대중공업 지주에 직접 편입했다.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현대힘스도 현대중공업지주에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너 지분율이 높은 지주 회사에 현금 확보가 쉬운 사업부를 몰아주고 있다.

대우조선 인수로 이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정몽준 일가의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의 선박AS를 현대글로벌서비스가 맡게되면 사업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진다. 재벌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대우조선을 넘기는 특혜 매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송덕용 회계사는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안을 보면 매출 추정액이

2019년 기준 5조 원이다. 2018년 9월말 12조 5천억 원의 수주 잔액이 있었고, 2018년 4분기에 1조 원의 추가 수주를 했다” 라고 밝혔다. 송덕용 회계사는 “정부와 현증이 대우조선의 부실을 부풀리고 회사가치를 낮추고 있다. 수익효과가 현대중공업지주에 돌아갈 우려가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 부실 정리에 7조 원을 투입했지만 매각 과정에서 단기 현금 회수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비판했다.

조선 노동자들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시도가 한국 조선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매각 저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하태준 노조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실장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의 영속 발전보다 혈값 매입후

시장 장악력 확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을 의도가 있는 인수라고 본다”라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과 25만 거제시민이 힘을 모아 인수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형균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해양부문 조합원 560여 명이 휴직 중이다.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 상황에서 해양 조합원을 조선 부문으로 이전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됐다” 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김형균 실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리고, 금속노조와 보조를 맞춰 끝까지 투쟁하겠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고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조 기아차지부 통상임금 소송 2심 승소 ... “기아차 존립 위태로울 정도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고법은 기아자동차가 제기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22일 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천97억 원 등 모두 4천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2심 법원은 가족수당을 제외해 원금 가운데 1

억 원이 준 4,022억 원을 인용했다.

서울고법은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대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강상호 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서울고법 판결 뒤 “일부 항목이 빠졌지만, 법원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아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체불임금 문제를 한시 빨리 해결해야 한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2월 14일 인천 시영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엄격하게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아자동차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노조의 통상임금 지급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 원칙’ 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는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체불임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